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목	코로나 대유행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본질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다. 더이상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긴급농성 기자회견>
일자	2021년 1월 15일 (금) 오후 2시
발신 (담당)	장애여성공감(이진희 010-5352-723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우정규 010-8581-2129)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김수경 010-2408-1410)
분량	총 7 매

**코로나 대유행으로 밝혀낸 장애인 거주시설의 본질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다.**

**더이상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월 15일 (금) 오후 2시
- 장소 : 신아재활원 정문앞(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울시 송파구의 신아재활원은 11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69명의 종사자가 일하는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지난 12월 26일 4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코호트 격리 되었으며 1월 10일까지 76명 (거주인 56명, 종사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2월 29일 서울시청 앞 농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단수용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와 예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코호트 격리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치료를 위한 전원조치와 활동지원 제공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취약한 대규모 시설, 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긴급탈시설'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그 결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서울시와의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12월 30일에는 “코로나 K-방역이 놓치고 있는 것은 D(For the Disabled)-방역이며, D-방역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단 생활시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대본의 코호트 격리 해제와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정세균)면담을 요구하며, 집단수용시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긴급탈시설'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농성 15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1월 11일(월) 서울시로부터 신아재활원의 확진자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비확진자는 가평과 명동의 임시숙소로 긴급분산 조치 완료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산조치된지 3일만인 1월 14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비확진자를 재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위험한 환경에서 탈출한 장애인 당사자들을 코로나 방역 지침 2.5단계인 상황에서 다시 시설로 몰아넣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확진자의 경우 2주의 자가격리 기간 원칙도 지키지 않고 다시 집단 감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 숙소의 경우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지자체가 지정한 숙소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도/훈련시설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과 장소를 방역의 대상인 신아재활원에서 결정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해명과 책임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원칙이지만 장애인수용시설은 이 지침과 무관하게 집단감금의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폭력적인 조치에 분노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농성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1년 1월 15일 (금) 오후 2시
- 장소 : 신아재활원 정문앞 (서울시송파구 거여동)
- 사회 : 한명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진은선(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습] 팀장)  
문애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긴급탈시설 이행 요구안

붙임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요구안

붙임 3. 서울시 코로나 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끝.

## 붙임 1] 기자회견문

### 신아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긴급분산조치 유지하고 긴급탈시설 이행하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 시키는 집단 수용 정책에 있다. 장애계가 한파에도 농성을 불사하며 긴급분산조치를 요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단 거주시설이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 방역 2.5단계의 지침을 준수하여 거리두기 할 수 없는 주거 환경, 확진자의 치료 공백, 비확진자의 외부소통과 정보의 폐쇄성, 자기 결정과 보호의 통제 등이 열악한 방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외부와의 관계와 자원으로부터 일체 차단된 상태에 놓여진 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지원 사업은 가로막히고 집단 감금의 상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아원의 경우 2020년에 시설내 보호작업이나 여행 프로그램은 진행되었지만, 외부 민간 단체가 서울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한 탈시설 지원사업은 한 차례도 진행하기 어려웠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때 종사자보다 거주인이 더 높은 감염율을 보였다. (신아원 종사자 29.9%, 거주인 47.9%) 외부와 차단되어 격리상태에 놓인 사람이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발표와 대책없이 방역과 인권이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로 재입소 시키는 것은 다시금 코로나19와 열악한 인권상황에 노출되도록 정부가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1월 11일 안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집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곳도 코호트 격리 조치 되었다.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미 사회에서 수십년 동안 격리된 상태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라는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에 대비할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탈시설이란 다른 조건을 선택할 권리도 차단 당했다. 코호트 격리 이후 신아원의 확진자는 긴급분산조치 이전까지 계속해서 늘어났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실패했다. 따라서 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코로나19의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이 재난상황에서만 예외적인 전략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탈시설 정책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설의 인권침해적 본질을 드러낸 계기이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회복(Building back better)’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증만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행동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을 지적하며 ‘긴급탈시설’을 제안한다.

우리는 ‘긴급분산조치’는 시설내 청소나 방역을 위한 임시적 조치가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도 안전할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 이어야 한다. 신아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역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즉시 코로나19의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신아원 거주인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책을 약속받기 전까지 신아원 정문 앞,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 붙임 2]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긴급탈시설 이행 요구안

1.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집단감염에 따른 '긴급분산조치' 유지
  - 1-1. 확진자 치료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
  - 1-2. 자가격리 시 필요한 생활 및 방역 물품 지원 및 예방 대책 수립
  - 1-3. 자가격리된 비확진자에 대한 장기 주거공간 마련
  
2.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거주인 전원 '긴급탈시설' 이행
  - 2-1. '긴급분산조치' 이후 '긴급탈시설'이행 계획 수립
  - 2-2. 긴급분산조치 이후 코로나19 감염기간에는 신아원 복귀 불가
  - 2-3. 치료와 자가격리 이후 거주인 전원에게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 2-4.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에 필요한 예산 반영(보건복지부, 서울시, 송파구청)
  
3. 긴급탈시설 이행 이후 탈시설지원 이행 연결
  - 3-1.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지원인력 체계 마련
  - 3-2. 임시거주공간 확대 제공 및 자립생활주택, 장애인지원주택 적극 확보 및 연계
  - 3-3. 긴급탈시설 이행 기간, 신아원 종사자 연계하여 서비스 인력제공
  - 3-4. 긴급탈시설 이행 기간동안 지원서비스 제공은 신아원에서 책임
  - 3-5. 긴급탈시설에서 탈시설로 이행 과정에서 서비스지원 책임 기관에 대한 공모
  - 3-6. 2020.12.10.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에 근거한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에서 이사회 의결을 전제로 지역사회 장애인주거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참여
  
4. 민관대책기구 구성 및 실행
  - 4-1.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긴급 탈시설 이행관련 계획수립과 이행, 점검 등 역할 수행
  - 4-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서울시, 송파구청, 신아원, 해당보건소 등 참여

### **붙임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요구안**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요구안**

### **1.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 실행 지침 마련**

- 2020.12.29.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재난적 상황인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긴급분산조치'를 이행하여 신아재활원 공간을 비우는 것으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 하였음.

-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방대본의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코호트격리'라는 원칙을 폐기하고 즉각적인 '긴급분산조치'를 통해 인간으로 존엄한 삶의 가치를 지켜야 할 것임.

### **2. '긴급분산조치' 기간은 코로나 1단계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합금지명령 수준의 지침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적용되어야 함.**

- 코로나 K-방역이 놓치고 있는 것은 D(For the Disabled)-방역이다. D-방역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생활시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긴급분산조치' 이후 집단거주시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코로나 감염의 취약하고 대규모 집단감염을 발생시키는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이행이 필요함.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의 면담 요청**

- 현재 긴급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는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긴급분산조치'의 빠른 결정을 위한 면담을 공식 요청함.

- 신아재활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 방침을 중단하고 '긴급분산조치'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우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앞 농성과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즉각적인 면담투쟁을 진행할 것임.

**붙임 4] 12월 30일 서울시 코로나 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I·SEOUL·U <small>서울특별시</small>	<b>서울특별시</b>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경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제목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이용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재난적 상황인 집단감염 긴급조치로 '긴급분산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시설의 공간을 비운다.
- 서울시는 확진 판정받은 거주인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음성 판정 받은 거주인은 긴급 임시거주공간, 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을 마련하여 분산한다.
- 긴급 임시거주공간에서 거주기간은 일차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으로 진행하고 이후 코로나 1단계로 떨어지기 전까지 기간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요청한다.
- 해당시설 거주인에 대하여 긴급 임시거주공간에서 개별접촉이 가능한 상황을 검토하여 개인 별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서울시 탈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대형시설인 해당 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인 탈시설 계획을 이행한다.
- '긴급분산조치'에 대한 이행과 점검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서울시 탈시설민관협의체에서 진행한다.
- 서울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에 반영한다. 끝.